

출국막자 밀린 양육비 1억 상환... “제재조치 더 확대해야”

8년간 9100건, 총 1326억원 양육비 지원 성공 양육비 이행률 40.3%...2027년까지 55% 목표 부족한 인력에 낮은 접수율...감치명령 한계도 비양육 위장전입·잠적시 장기전...“애들 다 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각종 제재 조치를 시행하자 1억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조치를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4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9100건, 1326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았던 이모씨는 1억2560만원의 양육비 채무를 전부 상환했다. 제재 조치 시행 후 전부 상환한 양육비 채무액 중 최고액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후 양육비 지원을 받은 사례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9월 국회입법조사처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2015~2021년 2만5791명의 양육비 지원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81.8%인 2만1103명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약속을 받았다. 양육비 이행률 역시 2015년 21.2%에서 2022년 40.3%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회 근거 마련, 의견 진술 기간 단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양육비 이행률을 55%로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 이행의 속도는 여전히 더딘 편이다.

우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는 상담 건수 대비 접수건수가 2015년 18.7%에서 2021년엔 7.2%까지 감소했다. 직접 소송을 맡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직원 수는 현재 6명에 불과하다.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

고서에서 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가장 많은 25%가 대기 시간 및 소송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답변했다.

제재 조치의 경우 법원의 감치 명령이 내려져야 적용할 수 있는데, 2015~2021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과 위탁소송을 합한 소송 지원 현황이 총 4만7817건인데 감치명령이 내려진 건 1951건 뿐이다.

이마저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도윤 양해연 이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되는 분들은 대부분 비양육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는데, 비양육자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잠적해서 어디 사는지 모르면 양육자가 찾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아예 양육비 지급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비양육자가 잠적을 했더라도 3번의 감치 송달을 전달받지 못하면

그 이후 법령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감치 특별 송달 제도가 입법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이사는 “법대로만 진행을 해도 최소 1~2년은 걸리고 형사처분까지 가면 평균 4년을 보는데, 양육자가 잠적을 해버리면 ‘감치 허들’을 넘기까지 애들이 다 커버린다”며 “외국에서는 자식과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사는 것도 잘못이라고 보고 비양육자에게 어떤 양해를 해주지 않는다. 감치 허들을 폐지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있다 보니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황상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멜론은 100% 재생에너지 사용하라’ K팝 팬들의 외침 K팝 팬들이 주도해 결성한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 포 플래닛’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공개 프로젝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케이팝 포 플래닛은 이날 국내 음악 스트리밍 1위 서비스인 멜론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과 데이터센터에서 사용 중인 재생에너지 비율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멜론은 지난해 국내외의 K팝 팬 5만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2 최악의 스트리밍 설문조사에서 1위에 선정됐다.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野, 2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입장 밝혀

제조업체 대다수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기업유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9~10일 제조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응답기업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에 달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돼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 발생’(56.9%)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순채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16.3%) 등이 뒤따랐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 ‘원청노동자 하청노동자 갈등’(55.0%)을 가장 우려했



으며, ‘원청의 연중고용’(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동자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권한·독립성 약화’(31.2%),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계약 확대’(21.8%),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 처리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휩싸이고 불법 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환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